

한국 통신사의 구조적 특성의 형성과정

— 1945~1980의 시기를 중심으로 —

박용규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통신사는 언론사는 물론 정부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을 상대로 국내외의 다양한 뉴스나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팽원순, 1989, pp. 220-235) 즉 통신사는 국가들 사이에서, 그리고 한 국가 내부에서 뉴스나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통신사의 등장이 뉴스의 개념과 형식을 변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주었을 정도로 언론기관에 대한 뉴스의 제공이라는 통신사의 기본적인 역할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 개인을 상대로 직접 뉴스나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인지 그 동안 통신사의 구조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언론학자들조차도 통신사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여 오지 않아 전체적으로 연구가 별로 활성화되지 않았다.(Rantanen, 1997, p.605) 특히 한국에서는 그 동안 팽원순(1982; 1983; 1988; 1989; 1990)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본격적인 연구가 거의 없었다.

통신사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크게 통신기사에 대한 내용분석 연구, 통신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 통신사의 발전과정에 대한 역사적 연구 등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Rantanen, 1997, pp.606-607) 이런 분류에 따를 때 한국의 경우 첫번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외신보도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¹⁾ 하지만 지금까지 통신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드물고,²⁾ 통신사의 역사적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로는 통신사가 발행한 사사(社史) 정도가 있을 뿐이었다.³⁾ 이렇듯 한국에서 통신사에 관한 연구가 매우 부진했던 배경에는 통신사의 활동이 그리 활발하지 못했다는 역사적 요인도 작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서는 연합뉴스⁴⁾의 독립과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편 새로운 통신사의 설립이 추진되기도 하면서 통신사에 대해 비교적 관심이 높아지고 논의도 활발해졌다.⁵⁾ 다만 토론회 등을 계기로 이루어진 이런 논의들이 아직까지는 체계적인 연구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통신사의 과거 활동에 대해서도 자의적이고 일면적인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⁶⁾ 이런 한계는 아직까지 통신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다소 부족하다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 1) 이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성과들로는 김민환·심재철(1995), 추광영(1997) 등을 들 수 있다.
 - 2) 은종일(1988), 현소환(1988) 외에 임동욱(1998)의 연구도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3) 사사로는 합동통신사(1975)와 동양통신사사 편찬위원회(1982)가 있고, 이외에 홍일해(1982)의 저서가 있지만 이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사사를 요약해 놓은 수준을 크게 벗어 나지 못했다.
 - 4) 1980년 12월 19일에 출범했던 연합통신은 1998년 12월 19일에 사명을 연합뉴스로 변경했다.
 - 5) 1998년과 1999년에는 기자회견이나 언론노련 등이 주최하여 통신사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 6) 연합뉴스 위상 재정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1980년 이전에 재벌 소유 통신사들이 벌였던 과당경쟁의 폐해를 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경쟁체제의 도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대체로 1980년 이후의 통신사 독점체제의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통신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세계화·정보화 시대 속에 정보주권을 확립하고(임동욱, 1998), 통신사와 신문·방송사가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통신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국 통신사의 구조적 특성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에 대한 역사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과거의 활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통신사의 구조나 기능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1980년에 통폐합되기 전까지의 한국 통신사의 구조적 특성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신문이나 방송과는 달리 통신사의 경우 1980년 이후 오랫동안 변화가 없다가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즉 연합뉴스가 위상 재정립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통신사 시장에도 경쟁체제가 도입되는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⁷⁾ 본 논문은 바로 이런 변화의 와중에서 1980년 이전까지의 통신사의 구조와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후의 변화 추세를 조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권력에 대해서 종속적일 뿐만 아니라 외국 통신사나 국내 신문·방송사와는 지나치게 불평등한 관계 속에 놓여 있는 한국 통신사의 구조적 특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오늘에 이르렀는가를 밝히고, 나아가 이런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의 시기와 내용

통신사의 활동에 대해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자본의 논리가 작용하는 방식은⁸⁾ 신문이나 방송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우선 국내외 뉴스와 정보

7) 1997년 11월에 문화관광부(당시 공보처)에 새로운 통신사의 설립허가를 요청했다가 다음 해 2월에 반려당하고 소송을 냈던 뉴스서비스코리아(NSK)가 1999년 2월의 1심과 10월의 2심에서 모두 승소함으로써 이제 사실상 통신사의 경쟁체제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통의 전초기지라는 역할 때문에 신문이나 방송에 비해 비교적 강력한 국가 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⁹⁾ 또한 주고객이 언론사이고, 기사전재료나 정보이용료 외에 다른 수입원이 없는 시장구조의 특성 때문에 신문이나 방송과는 달리 자본의 이윤추구 논리에 적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Fenby, 1986) 특히 이윤추구의 한계라는 요인은 다시 국가개입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서구의 주요 통신사들은 신문사 등에 뉴스나 정보를 제공해 이윤을 얻고자 하는 사기업으로 출발했거나 또는 뉴스를 효율적으로 제공받기 위해 결성된 신문사들의 협동조합으로 출범했다. 이런 통신사들은 소유형태가 어떻든 간에 국내외 통신사들과의 경쟁 속에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뉴스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런 과정에서 기존 통신사들이 활동 영역을 넓히거나 또는 특화된 영역 속에서 활동하는 통신사가 생기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다.¹⁰⁾ 전자의 전형적인 경우로 경제정보 제공으로 활동영역을 넓혀 성공했던 로이터를 들 수 있다. 반면에 AFP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아야만 운영될 수 있었고(Hachten, 1996, pp.36-45), UPI가 시장구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위기를 겪었다는 것은(Schwarzlose, 1992, pp.147-157), 통신사 시장구조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예들이었다.

반면에 제3세계의 통신사들은 대부분이 2차대전 후에 국가 주도하에 단일 국영체제로 출발했다. 이것은 통신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자본과 시장이 미비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보다도 국가가 국내외의 뉴스나 정보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

8) 국가개입과 언론자본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조항제(1994, pp.9-41)를 참조할 수 있다.

9) 1979년경에 전세계의 통신사 중에서 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통신사가 73%에 달했다.(Mowlana, 1986, pp.62-63)

10) 국내뉴스만을 다루는 영국의 Press Association(McNair, 1994, pp.183-185), 뉴스필름을 공급하는 Visnews나 UPITN(King, 1981), 주요 신문들이 보조 통신사로의 역할도 하는 미국(Kingsley, 1992) 등의 예 외에도 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소규모의 통신사들이 있다.

였다.(팽원순, 1982, pp.110-111) 이러한 제3세계의 단일국영통신체제는 국가가 철저히 통신사의 활동에 개입하여, 자본의 논리가 작용될 수 있는 여지를 거의 남겨 놓지 않은 것이었다.

결국 서구의 경우 통신사의 등장과 변화과정에 상대적으로 자본의 논리가 더 크게 작용해 왔다고 한다면, 제3세계의 경우 주로 국가의 개입이라는 요인이 더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¹¹⁾ 이런 차이는 비단 통신사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신사의 경우에 더 명확하게 나타났다고는 할 수 있다. 서구의 경우 통신사 시장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었지만, 제3세계의 경우 국가가 통신사 시장의 성장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채 지속적인 개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 경우에도 통신사의 활동에 대해 국가의 개입이 더 큰 영향을 주어 왔다. 다만 적어도 1980년 이전까지는 사기업인 여러 개의 통신사들이 활동했다는 점에서 제3세계의 다른 나라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국가가 나서서 통신사들을 통폐합하려고 하거나 비판적 활동에 대해 규제를 가했지만, 사기업인 통신사들은 제한된 시장을 둘러싸고 나름대로 치열한 경쟁을 했다. 따라서 신문이나 방송의 경우와는 다소 다르지만(김해식, 1993; 조항제, 1994), 1980년 이전까지는 통신사에 대해서도 국가의 정책과 통신사 자본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국가의 통신사 정책을 통폐합 추진 및 보도활동에 대한 통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통신사의 소유구조 및 경영상태에 관해 살펴봄으로써 통신사 자본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통신사의 역할과 활동의 내용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1) 팽원순은 통신사들을 정부개입의 정도에 따라 자유형과 통제형으로, 소유·경영방식에 따라 상업, 협동, 국영으로 나누고 나서, 서구의 주요 통신사들은 주로 자유형 상업 또는 협동통신사인 반면에 제3세계의 통신사들은 주로 통제형 국영통신사라고 주장했다.(1982, pp.98-112)

또한 본 논문에서는 종합통신사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여,¹²⁾ 미군정기,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유신정권하의 네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¹³⁾

2. 미군정기의 통신사

1) 미군정의 통신사 정책

미군정이 해방 직후 한 동안 언론자유를 다소나마 허용하면서 신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념적 성향을 지닌 많은 통신사들이 생겼다. 미군정의 이런 정책에 따라 단일국영통신체제를 도입했던 대부분의 신생국들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사기업인 통신사가 여러 개 생겨 활동하게 되었고(팽원순, 1982, pp.184-186), 그 수가 1946년 5월 현재 11개에 이르게 되었다.(조선통신사, 1947, pp.281-283) 이런 결과는 미군정 초기의 언론정책과 다양한 정치세력이 등장해 활동했던 사회상황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었다.

한편 미군정은 일제하 동맹통신의 경성지사 시설을 접수하여 미군정 관리하의 국제통신을 만들기도 했지만, 군정통신으로서 관영적 성격을 지니고 있

12) 종합통신과 특수·전문통신을 모두 포함한 일간통신의 수의 변화는 아래의 표와 같다.

	1950	1951	1952	1953	1955	1956	1961	1963	1964	1965	1969	1970	1971	1972	1976
일간 통신	12	14	15	16	15	14	12	8	9	10	7	11	7	6	7
일간 신문	44	46	49	49	45	43	38	34	35	39	44	44	44	42	37

자료: 주동환(1993, p.41, p.82, p.124), * 통신사의 수에 변동이 있던 해만 정리함.

13) 기존의 한국언론사 연구들은 주로 정권의 변화를 시기구분의 근거로 삼아 왔다. 이것은 「정치권력의 성격이 언론에 거의 절대적으로 반영되어 온 한국 근현대사의 특수성」 때문이다.(김민환, 1996, p.39) 또한 언론 현상 자체로 시기구분을 하기 어려울 만큼 언론사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작용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권의 변화만을 시기구분의 근거로 삼는 경향을 극복해야 하겠지만, 당분간은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는 이유 때문에 외신계약에 실패하자 국제통신이 AP와 계약했던 연합통신과 합병하여 합동통신으로 발족하도록 허용했다.(합동통신사, 1975, pp.2-7) 이후 미군정은 우익계 통신사의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통신사 정책은 우익계의 활동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신문정책은 물론 직접 장악·관리했던 방송정책과도 다른 것이었다. 이것은 그 특성상 통신사의 활동에 대해서는 미군정이 직접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만 미군정은 좌익계 통신사의 활동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신문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통제를 가했다. 미군정이 1946년 중반 이후부터 점차로 언론통제를 강화해 나가면서 1946년 7월에 좌익계인 공립통신의 기자 조규영이 구속되고, 1947년 8월에 좌익계인 해방통신이 정간처분되고 사장 박익서가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계훈모 편, 1987, p.130, p.311) 한편 1947년말에는 합동통신에 내분이 생기자 군정청 공보국장 함대훈이 방문하여 「치안방해」 조항에 해당하는 「불순분자」의 색출을 요구했던 일도 있었다.(합동통신사, 1975, p.45)

2) 통신사의 소유구조와 경영상태

미군정기의 통신사들은 신문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과 이념적 지향을 가지고 활동하기 시작했다. 즉 군소 통신은 물론 주요 통신사들까지도 나름대로의 이념적 성향을 드러냈는데, 조선통신의 경우는 경영진과 달리 좌익계였던 기자들의 활동 때문에 ‘좌경적’이라는 평을 듣기도 했고,¹⁴⁾ 적산인 구 동맹통신의 시설과 기자재를 사실상 불하받은 셈이었던 합동통신

14) 사장 김승식은 미국 켈러비아 대학 출신으로 미국 측과 비교적 가까운 편이었지만, 좌익계 기자들의 활동 때문에 조선통신은 ‘좌경적’이라는 평가까지 듣게 되었던 것이다.(동양통신사, 1982, pp.67-69) 이런 이유로 1947년 2월 7일에는 회사측이 기자들을 파면하고, 기자들이 이에 반발해 파업을 하는 등의 혼란이 생기기도 했다.(계훈모 편, 1987, pp.202-203)

은 우익계를 대표하는 통신으로 활동했다. 이렇듯 통신사들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식을 가지고 활동했던 것은 통신사의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통신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조선통신은 김승식의 투자에 힘입어 주식회사 체제로 출발했고, 합동통신은 외신계약사였던 AP의 영향 때문인지 회원제 통신사로 출발했지만 회원사들의 비협조로 인해 3개월만에 포기하고, 다음해인 1946년 10월에 주식회사 체제로 새로이 출발하였다.(합동통신사, 1975, pp.18-25) 합동통신이 우익계 신문들과 방송사가 참여하는 회원제 통신사로 출발했다가 실패했던 것은 주요 회원사들의 경영난과 인식 부족 때문이었다. 특히 신문사들의 필요의 산물로 출발했던 회원제 통신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비교적 규모가 컸던 합동통신과 조선통신까지도 경영상태가 매우 좋지 못했다. 이것은 대자본을 출자한 인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다가, 해방 직후 서둘러 미국의 UP나 AP 등의 국제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제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의 외신계약료를 지불했던¹⁵⁾ 반면에 경영난에 시달리던 신문사 등으로부터는 전재료나 구독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즉 시장 규모나 조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통신사가 생겼고, 또한 주로 정치적 목적을 앞세우며 활동했기 때문에 경영상태가 개선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따라 합동통신은 1946년 10월 15일부터 이해 연말까지의 3개월 반 동안에만 69만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다. 이것은 당시 통신의 유가부수가 90부에 불과했고,¹⁶⁾ 그나마도 전재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조선통신은 1947년 6월에 광고대행업무를 시작하여 경영상태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¹⁷⁾ 7월에 사장 김승식이 적산 물품을 횡령하

15) 해방된 지 두 달만인 1945년 10월 29일에 조선통신이 비싼 가격으로 UP와 계약을 맺음으로써 그후 다른 통신사들도 애를 먹게 되었다고 한다.(김광섭, 1988, p.54)

16) 1946년말 현재 합동통신은 언론기관 51, 금융기관 7, 회사 19, 기타 13, 기증 69부 등 총 159부 중에서 90부만이 유가부수였다.(합동통신, 1975, pp.27-28)

17) 조선통신은 1947년 6월에 '광고대리부'를 신설했다.(계훈모 편, 1987, p.158) 김승식이

고 도주하여 더욱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었다.(계훈모 편, 1987, p.258, p.284) 이 같은 상황에서 통신사가 본연의 역할을 다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3) 통신사의 역할과 활동

해방 직후 등장한 통신사들은 경제적, 기술적으로 열악했던 조건 때문에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웠다. 이들 중에서 조선통신과 합동통신만이 UP나 AP 등과 계약을 맺어 외신제공 활동까지 제대로 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라디오프레스를 이용해 제한적으로나마 외신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내신만 제공하는 활동을 했다. 그러나 외신 계약을 맺고 활동했던 통신사들도 내신 면에서는 그리 활발한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웠고(오소백, 1959, p.51), 군소 통신사들은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그 나머지의 역할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특히 이 시기의 주요 통신사들은 열악한 통신시설로 인해 외신을 수신하고, 통신기사를 언론사 등에 송신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초기에는 주로 단파 수신이나 모스 수신방식을 취했고, 언론사 등에는 필경원고를 등사해 배달하거나 지방의 경우 전보를 이용하기도 했다.(합동통신사, 1975, pp. 15-17, pp.29-34) 따라서 통신사의 생명인 속보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직후 갑자기 등장한 많은 신문사들이나 보도기능을 강화한 방송사는(한국방송공사, 1977, p.167) 취재진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통신기사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외신의 경우 전적으로 통신사에 의존했던 것은 물론 내신의 경우에도 통신사에 상당 부분을 의존했다.¹⁸⁾ 특히 신문들의 경우 자신들과 같은 이념적 성향을 지닌 통신사의 기사를

조선통신, 고려통신에 이어 발행했던 한국통신도 1950년 4월에 광고대행업무를 하고 광고를 했다.(신인섭, 1986, p.260) 이런 통신사의 광고대행업무 수행은 주로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18) 이종모는 당시 신문들이 자신이 편집국장이었던 조선통신의 기사에 크게 의존하여,

주로 이용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좌익계 신문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좌익계 통신사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었던 것이다.

3. 이승만 정권하의 통신사

1) 이승만 정권의 통신사 정책

이승만 정권이 들어선 직후 언론통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다소나마 진보적 색채가 있는 통신사는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조선통신이 필화로 인해 1948년 10월 13일에 발행허가취소처분을 받고 2명이 구속되었으며,¹⁹⁾ 공립통신은 제대로 활동조차 못하게 되었다. 또한 1951년말에 이승만 정권은 외신계약료 지불을 위한 외화사용을 막아²⁰⁾ 야당계 무소속 국회의원 정일형이 발행하던 대한통신을 양우정과 김성곤에게 넘어가게 만들었다.(동양통신사, 1982, pp.84-85) 이것은 통신사가 야당 인사에 의해 운영되어 비판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듯 이승만 정권은 진보적인 통신사는 물론 비판적인 우익계 통신사에 대해서도 통제를 강화했던 것이다.

한편 이승만 정권은 한국전쟁 중에 통신사 통폐합을 위한 시도도 하였다. 1950년 8월 6일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민의원사무국장 박종만은 기존 통신사들의 기자재와 인원을 모아 전시연합판 《대한통신》을 발간하기 시작했다.

“한 동안 조선통신사가 전국신문을 조종할 만큼 세력이 막강하였다”고 주장했다.(1978, p.760)

19) 조선통신의 발행허가취소에는 단순히 ‘좌경적’이라는 요인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적 요인도 작용했던 듯하다. 즉 당시에 공보처장 김동성이 과거에 합동통신에 관여했었기 때문에 경쟁자인 조선통신의 허가를 취소했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한다. 국회사무처, 《국회속기록》 제1회 116호(1948. 11. 29), pp.119-120.

20) 외국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통신사의 특성은, 외화사용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쉽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부가 쉽게 통폐합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 뒤 박종만은 아예 대한통신을 중심으로 통신사를 1개사로 통폐합하려고 시도했지만, 외신계약 등의 기득권을 내세운 합동통신 측의 반발로 실패하고 말았다.(합동통신사, 1975, pp.65-68) 이런 시도는 전시 상황을 이용해 통신사를 통폐합하려고 했던 정부의 의도와(팽원순, 1982, pp.190- 191; 주동황, 1992, pp.30-33) 이에 편승했던 박종만의 개인적 야심이 결합해 이루어졌던 것이었다.(고홍상, 1959, p.637)

나아가 이승만 정권은 50년대 중반에는 아예 여당계 통신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즉 이른바 ‘야당통신’인 합동통신에²¹⁾ 맞서는 여당계 통신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²²⁾ 1956년 9월 1일 정재호가 자신의 처남이며 당시 경무대 비서관이었던 박찬일의 도움으로 동화통신을 창간하자 합동통신은 AP와의 계약이 끊길 뻔하다가 동화통신과 함께 이중계약을 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합동통신사, 1975, pp.137- 151) 또한 1957년에는 이기봉의 측근이자 자유당 공보위원장이었던 이철원이 기존의 세계통신을 인수해 명실상부한 자유당의 ‘전위통신’을 만들었다.(합동통신사, 1975, p.153) 세계통신은 정부 관련 취재원을 독점하다시피 했고, 관공서나 국영기관으로부터 고액의 구독료를 받아 운영되었다.(팽원순, 1982, pp.198-199) 그러나 이승만 정권이 여당계 통신사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야당계 통신사의 활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21) 합동통신이 비판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은, 한민당의 사실상의 기관지로서 이승만을 적극지지 했던 동아일보가 1950년대에 야당지가 되었던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22) 이영희는 합동통신이 ‘야당통신’으로 ‘미움’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승만 정권이 동양통신, 동화통신, 세계통신을 창설해 합동통신에 ‘집중타’를 가했다고 주장했다.(1988, p.298) 동양통신 측에서조차 1950년대 말의 합동통신은 ‘친야적 중립,’ 동양통신은 ‘친여적 중립,’ 동화통신은 ‘친여적,’ 세계통신은 ‘여’로 구분하였다.(동양통신사, 1982, p.183)

2) 통신사의 소유구조와 경영상태

정부수립 직후 조선통신이 폐간되자 김승식은 다시 UP 계약권을 물려받은 고려통신, 한국통신을 창간했다. 김승식의 납북으로 한국통신이 없어진 후 UP 계약권은 대한통신이 이어 받았는데, 대한통신은 박종만, 정일형을 거쳐 1952년 4월에 당시 대표적 여당계 신문이던 연합신문 사장 양우정과 금성방직을 운영하던 김성곤에 의해 인수되어 동양통신으로 새로 출범하였다. 김성곤은 '정국은 사건'으로 양우정이 퇴진한 후 1953년말 동양통신을 주식회사 체제로 출범시키며 사장이 되었고, 다음해 3월에는 연합신문까지 인수했다.(동양통신사, 1982, pp.126-154) 김성곤은 뒤에 정계에도 뛰어들어 1958년 5월에 자유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한편 합동통신은 대주주가 없는 주식회사 체제로 운영되며 어려움을 겪다가, 1954년 8월에 남선무역주식회사 사장이며 신동아손해보험주식회사 회장이었던 김원규가 52%의 지분을 갖는 대주주가 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을 하게 되었다.(합동통신사, 1975, pp.101-104) 그러나 김원규가 직접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야당 측과 가까웠던 이관구나 김동성 같은 언론인 출신들이 경영을 주도했기 때문에 합동통신은 1950년대의 다른 통신사들과 달리 비판적 논조를 보일 수 있었다.

또한 1953년 6월 4일에는 무역회사인 미진상사 사장이며 부산의 국제신보 사장이기도 했던 이연재가 창간한 세계통신이 로이터와 계약을 맺고 활동을 시작했다.(한국신문연구소, 1975, p.570) 세계통신은 이후 심각한 경영난을 겪다가(김형균, 1978, p.419) 1957년 10월에 이철원에 의해 인수되었던 것이다. 또한 1956년 9월 1일에는 삼호방직 사장이자 대구의 영남일보와 대구일보의 취체역(이사)이던 정재호가 동화통신을 창간했다.(팽원순, 1982, pp.193-194) 이렇듯 합동통신을 제외한 나머지 통신사들은 정권의 도움을 받아 재벌이 소유하거나 또는 정권이 사실상 직접 소유한 것들로서 언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팽원순, 1988, p.89)

<표 1> 합동통신과 동양통신의 손익계산서

단위: 환

회사명	항목	합동통신				동양통신			
		1953	1954	1955	1956	1958	1959	1958	1959
합동통신	수입	5,709,915	17,215,642	47,300,000	73,600,000	동양통신	수입	73,510,310	77,325,600
	(통신료)	(5,709,915)	(17,215,642)	(43,800,000)	(59,900,000)		지출	78,845,541	89,741,452
	지출	9,247,951	23,185,903	55,100,000	78,100,000		손익	-5,335,231	-12,415,752
	손익	-3,538,036	-5,970,261	-7,800,000	-4,500,000				

자료 : 합동통신사(1975 p.124), 동양통신사(1982, pp.152-153)

* 1953년 2월에 구화 100원이 신화 1환으로 통화 개혁됨.

이렇듯 종합통신만 4개가 되면서 통신사들의 경영상태는 매우 악화되었다.²³⁾ 합동통신은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1953년에 세계통신이 생긴 후 적자가 계속 늘어났고, 단지 출판수입과 사진수입이 생긴 1956년에만 적자 폭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었다.(합동통신사, 1975, p.124) 동양통신의 경우에도 4개 통신사가 과당경쟁을 벌이던 1959년에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났다.(동양통신사, 1982, pp.152-153) 이것은 과당경쟁으로 인해 외신계약료가 크게 상승하고²⁴⁾ 송수신 시설의 개선에 드는 비용이 크게 늘어났던 반면에 경영난으로 인한 신문사들의 전채료 미수금은 계속 누적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정치적 필요 때문에 등장했던 통신사들은 과당경쟁 속에 「간신히 현상을 유지하는」 상태에 머물렀을 뿐이고(한국신문협회, 1968, p. 534), 이런 가운데 외신사 및 국내신문사들과 통신사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23) 최준(1959)은 통신사가 난립하여 제대로 활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일대 통신사’를 발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흥상도 전시하의 통폐합 시도는 비판하면서도 “그때 차라리 주요 통신이 일사로” 통합되었다면 통신사가 “좀 더 발전되었을는지” 모른다고 하며 통신사 난립의 폐해를 지적하기도 했다.(1959, p.637)

24) AP가 합동통신과 단독계약을 하고 있을 때의 외신계약료는 월 1,800불이었으나, 동화와 이준계약을 한 이후 2,600불로 올랐다. 또한 AFP가 합동통신과 동화통신을 왔다 갔다하던 3년 동안에 처음의 월 700불이 2,500불로 올라갔다.(합동통신사, 1975, p.163)

3) 통신사의 역할과 활동

1950년대 중반 이후 4개 종합통신사가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면서, 통신사들의 활동영역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전에도 이미 잠시 동안 특신판과 경제판을 발행한 바 있던 합동통신은 1958년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특신판을 발행하기 시작했다.(합동통신사, 1975, pp.169-170) 이미 영문 경제판을 발간한 바 있던 동양통신도 같은 해 12월부터 특신판을 발행하기 시작했다.(동양통신사, 1982, pp.177-180) 한편 동화통신은 1957년 9월에 AP-다우존스(Dow-Jones)와 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경제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한국신문협회, 1968, p.149) 물론 이 시기에는 내신의 취재보도 경쟁도 더 치열해졌고(합동통신사, 1975, pp.157-160), 50년대 말부터는 외신보도를 위해 일본과 미국으로 특파원을 내보내기도 했다. 특히 외국통신사와 이중계약을 할 정도로 외신제공을 둘러싼 경쟁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²⁵⁾

또한 50년대 중반 외신 수신과 통신기사 전송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즉 외신수신이 텔레타이프체제로 변화되고 사진도 전송받게 되었으며, 국내 통신사에 대한 외신 전송도 부분적으로 텔레프린터를 이용하게 되었다.(홍일해, 1982, p.37, pp.109-110) 그리고 통신제작도 필경 원고를 등사하던 것에서 벗어나 점차 국한문 타자기에 의한 활자인쇄로 바뀌었다.(합동통신사, 1975, p.116) 비록 과열경쟁의 산물이었지만 이런 변화는 통신사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 다만 전재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런 과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후 신문사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통신사에 대해 고압적 자세를 보이게 되는 빌미를 만든 측면도 있었다.

외신은 물론 내신까지 통신기사를 이용하던 경향은 대체로 6·25를 전후하는 시기까지 계속되어 이 시기를 “흔히 통신 전성시대”라고까지 했다.(합동통

25) 합동통신과 동화통신이 AP(1956. 4. ~1962. 11.), 합동통신과 동양통신이 UPI(1958. 5. ~1959. 4.), 합동통신과 동화통신이 AFP(1959. 6. ~1959. 11.)를 이중으로 계약하는 일도 벌어졌다.

신사, 1975, p.28) 특히 내신의 경우 통신사가 제공하는 기사가 다소 빈약했음에도 불구하고, 50년대까지는 신문사들의 자체취재역량 부족으로 인해(대한신문연감 편찬위원회, 1956, pp.90-91) 여전히 통신사가 제공하는 기사를 많이 전재했다.²⁶⁾ 한편 방송사들은 외신을 수신하기 위해 직접 텔레타이프를 설치하기도 했다.(한국방송공사, 1977, p.274) 특히 이 시기에는 여·야당지로 나뉘어 정파적 활동을 했던 중앙지들이 각각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부합되는 통신사의 기사를 주로 전재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이영희, 1988, p.298)

4. 박정희 정권하의 통신사

1) 박정희 정권의 통신사 정책

1961년 5월 28일에 군사정권은 언론사의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보부령 1호’를 공포했는데, 그 2조에서 “통신발행에 필요한 송수신 시설이라 함은 체신부 장관의 무선시설허가를 얻어 설치한 송수신 장치와 수반하는 외신계약 및 국내 각 사와의 전재계약이 완비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다.²⁷⁾ 이 조항은 “통신사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 요건을 처음으로 명문화한 것이었다.(고계경, 1975b, p.35) 이후 군사정권이 통신사통폐합을 서두르고 합동통신과 동양통신이 이에 호응하면서 논의가 급진전되다가(합동통신사, 1975, p.205; 동양통신사, 1982, p.209), 1962년 초에 최고회의의 공보실장 이후락이 “통신사 통합 추진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잠시 주춤하게 되었다.

26) 합동통신이 외신 계약의 어려움으로 인해 내신 제공에 주력하던 1950년대 말에 “전국 신문의 정치면 톱은 으레 합동 기사였다”고 할 정도로 내신의 경우에도 통신사 제공 기사에 대한 신문의 의존도는 매우 높았다.(합동통신사, 1975, p.160)

27) 5·16 직후 군사정권이 이런 기준에 따라 민주당 정권하에서 급증했던 통신사들을 정리하여, 308개까지 늘어났던 통신사가 11개로 줄어들게 되었다.(한국신문협회, 1968, pp.622-625)

최고회의가 1962년 6월 28일에 통신사통폐합을 포함한 언론정책의 기본방침 및 세부방침을 발표하고, 7월 31일에 그 시행기준을 밝히면서 다시 논의가 본격화되어 9월에는 합동통신, 동양통신, 동화통신 등 3개사가 '통합 합의각서'까지 작성했다.(합동통신사, 1975, pp.205-208; 동양통신사, 1982, pp.209-211) 그러나 그후 "무선(텔레타이프)으로 발·수신하는 외국통신사 3사 이상"과 계약하지 않은 통신사를 통폐합시킨다는 규정이 모호해 혼선이 생겼고,²⁸⁾ AP가 UPI를 계약한 외국통신사와는 계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정부주도의 통신사 통합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자 다시 담보상태에 빠졌다.(동양통신사, 1982, pp.214-215) 그 뒤 합동통신과 동화통신만의 통합이 추진되었지만 지분 문제로 난항을 겪다가 1963년 초에 통신사 통합은 사실상 철회되고 말았다.

5·16 쿠데타 직후의 통신사통폐합 시도는 군사정부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던 것이었지만, 국제통신사와의 계약 관계가 작용하게 되자 군사정권이 대외이미지 관리를 위해 포기하면서 무산되었다.(팽원순, 1982, pp.207-209) 군사정권이 추진했던 통신사통폐합 시도는 명백하게 뉴스 유통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시 언론들은 정부주도하에 단일통신사가 만들어지면 사실상 "관영통신으로 화(化)할 우려"가 있고(《동아일보》 1962. 7. 13.), 나아가 "통신사가 집권당의 농락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동아일보》 1962. 12. 6.) 비록 이런 시도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이후 박정희 정권이 통신사를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는 할 수 있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이 언론통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통신사들의 활동도 전체적으로 크게 위축되었다. 이런 가운데 1968년 7월에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동양통신의 기자 4명이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동양통신사, 1982, pp.267-282) 결국 3년 7개월만에 무죄로 결론 나고 말았던 이 사건은 3선 개헌을 앞두고 박정희 정권이 언론탄압을 더 강화하려고 했던 움직임

28) "외국통신 3사 이상과의 계약" 규정은 통신사들로 하여금 유명무실한 외국통신들과도 계약을 맺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고제경, 1975b, p.41)

의 일환이었으며, 동시에 공화당 내 실력자 중 한 명이었던 김성곤에 대한 정치적 ‘압력’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동계원경수선생 추모문집간행위원회, 1991, pp.231-232)

박정희 정권은 3선 개헌 다음해인 1970년에 다시 통신사통합을 추진하여 통신 3사 대표들과 은밀하게 접촉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이런 시도가 알려지자 문공부 장관 신범식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괴와의 대결과 대외적인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통신사의 자율적인 통합을 중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통합되도록 중용하고 통합된 통신사에 대해 재정적 협조를 하려고 할 뿐, 정부가 직접 통합을 추진하거나 경영에 참가할 의사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²⁹⁾

그러나 언론계의 반대와 통신사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박정희 정권이 추진하던 통신사통합 시도는 1970년 말에 사실상 실패하고 말았다. 특히 언론계는 관권에 의한 통신사통합이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통합에 의해 통신사가 독점되면 뉴스의 획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다.(팽원순, 1982, pp.211- 213; 주동황, 1982, pp.110-112) 박정희 정권은 무리하게 3선 개헌을 강행한 이후 비판적 여론이 일자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대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통신사 통합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통신사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박정희 정권의 통신사통합 추진은 시장억압적인 정책의 필요성 때문이었다기보다는 단순히 정치적 필요 때문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9) 조간인 조선일보의 1970년 6월 17일자 보도에는 통합될 통신사는 AP와 같이 신문사들이 공동출자하는 방식을 취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같은 날 석간인 동아일보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단지 통합될 통신사의 지분 중 55%를 정부가 출자하는 관영통신사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야당 측이 이의 철회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을 뿐이다.

2) 통신사의 소유구조와 경영상태

4·19 직후 세계통신이 폐간되고, 1961년 1월에 박두병이 합동통신을 인수하게 되면서³⁰⁾ 이제 세 종합통신을 모두 재벌이 소유하게 되었다. 즉 합동통신은 두산, 동양통신은 쌍룡,³¹⁾ 동화통신은 삼호가 소유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주력기업에 보탬이 될까” 하는 의도가 있었거나(김광섭, 1988, p.248), “재벌의 파수병” 역할을 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팽원순, 1988, p.89) 비판도 있었다. 한편 신문사들은 재벌들이 “무슨 이유로 통신사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잘 안다고 하며 통신사에 대해 고압적인 자세까지 보였다.(김광섭, 1988, p.245) 통신사들이 정부의 통제합 정책에 한 번도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쉽게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신문과는 달리 정부가 별 다른 특혜를 제공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런 재벌 소유의 한계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에도 재벌 소유 3개 통신사의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면서 경영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즉 1962년 9월 한 달 동안에만 동양통신이 143만 5천 원의 적자를 내서, 이를 금성방직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야만 했을 정도였다.(동양통신사, 1982, p.200) 이런 상황에서 동양통신은 1964년 2월에 주식회사를 사단법인 체제로 바꾸어 “사외의 원조를 합법화”하고 “목적사업(통신사업)을 위한 합법적 영리사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³²⁾ 이에 따라 1964년 5월부터 양회관 매사업, 다음 해 8월부터 운송업을 시작했고, 1971년부터는 하역·운송업으로 사업 방향을 바꾸었다. <표 2>에 나타난 액수의 지원으로 동양통신은 60년

30) 일찍부터 신문이나 통신 같은 언론기관을 소유하고 싶어했던 박두병은 “적자운영을 각오하고” 합동통신을 인수했다고 한다.(합동통신사, 1975, p.188, p.197)

31) 동양통신 사주인 김성곤은 공화당 국회의원으로 대구문화방송까지 소유하게 되었다.

32) 김성곤은 국회의원이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을 겸직할 수 없게 되자 동양통신을 사단법인 체제로 바꾸기로 결정하고, 그 기회에 “만성적인 적자를 벗어나는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양통신이 사단법인이 되면서 4개 계열사가 법인사원으로 월정액을 부담하게 되었고 부대사업도 하게 되었다.(성곡언론재단, 1995, pp.148-150)

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다소나마 흑자를 낼 수 있었다. 그러나 부대사업을 통해 상당히 큰 액수의 지원금을 받아 흑자를 기록했지만, 실제 통신사업만으로는 여전히 큰 적자를 내고 있었다.

<표 2> 동양통신 지원금 상황

단위 : 천 원

연도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액수	9,676	22,617	58,541	33,800	36,278	51,823	46,000	71,000	110,050

자료 : 동양통신사(1982, p.239)

* 1962년 10월에 구화 10환이 신화 1원으로 통화개혁됨.

또한 합동통신도 1964년부터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부대사업”으로서 광고대행업무를 시작했고, 1967년에는 광고기획실까지 만들었다. (합동통신사, 1975, pp.255-263) 광고대행업무를 처음 시작했던 1967년에 4천여 만원에 불과하던 광고대행실적이 1972년에는 7억원 정도로 크게 늘어났고, 이중 일부를 통신사업에 지원함으로써 합동통신도 심각한 경영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부대사업 없이는 유지될 수 없을 만큼 통신사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과당경쟁을 해 오면서 외신계약료가 계속 상승하고 송·수신 시설의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은 급격히 늘어난 반면 여전히 신문사 등으로부터 전재료는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즉 통신사들이 “동업상잔”으로 불릴 만큼 치열한 경쟁을 계속하며 통신기사 서비스를 ‘덤핑’해 왔고(고명식, 1968, p.67), 신문사들은 재벌들이 소유한 이런 통신사에 ‘안하무인격’으로 대하며 전재료를 올려주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었다.³³⁾ 이것은 결국 국가가

33) 김광섭은 통신사를 소유한 재벌들이 ‘경영상 흑자’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신문사들이 전재료를 인상해 달라는 통신사의 요구를 ‘양탈’ 정도로 받아들였다고 한다.(1988, pp.242-243) 또한 70년대에도 신문사들은 “통신전재료를 마치 잠비 지출처럼 다뤄 연수표(일종의 어음)를 발행”하기도 했다.(한국신문연구소, 1978, p.84)

시장의 논리를 억압해서가 아니라, 재벌 소유 통신사들이 스스로 시장의 논리를 관철시켜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못했던 결과였다. 즉 신문들과는 달리 재벌 소유 통신사들은 국가권력에 대해 제대로 비판조차 하지 못했고, 신문들과의 불평등한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거의 하지 못했던 것이다.

3) 통신사의 역할과 활동

1960년대에도 특신판, 경제판 등이 계속 발행되었고, 60년대 중반에는 동양통신과 합동통신이 모두 체육부와 문화부를 신설하기도 했다.(정수경, 1968, p.89) 특히 문화부의 활동은 특신판의 발행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합동통신사, 1975, pp. 224-230; 동양통신사, 1982, pp.246-252) 이런 내신 취재보도에서의 새로운 시도들은 중앙지들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방지들의 요구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즉 인원이 크게 늘어난³⁴⁾ 중앙지들과의 경쟁 때문에 불가피하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만 했고, 또한 피쳐(feature)물이나 ‘오락·문화기사’에 대한 지방지들의 요구도(진기풍, 1965, pp.16-18) 충족시켜 주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다만 통신사들은 재정난으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사건기사 등의 내신제공 면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정용현, 1970, p.4)

이후 통신사의 활동영역이 점차로 더 확대되어 1965년에는 합동통신이, 1970년에는 동양통신이 해외송신을 시작했고(고제경, 1975b, p.43), 1970년에는 합동통신과 동양통신이 모두 방송뉴스 서비스를 시작하였다.(고제경, 1975a, p.52) 또한 통신사의 활동영역이 더 넓어지면서 송수신 체제도 더욱 발전하여 1960년대 말부터 지방까지도 텔레타이프에 의한 자동송수신체제를 갖추었고, 특히 1970년대부터는 국문기사도 텔레타이프로 송수신하게 되었다.

반면에 통신사들은 과열경쟁 속에서 신문의 존재율을 높이기 위해 지나치게 선정적인 기사나 심지어는 오보까지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한국신문협

34) 중앙일간지의 편집진 인원은 1955년에 36명에 불과하던 것이 1967년에는 101명으로 크게 늘어났다.(강상현, 1988, p.234)

회, 1968, p.151; 고명식, 1969, p.68) 한편 통신사들이 “자기네 사 크레디트가 많이 나면 날수록 통신사의 위신이 오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명식, 1969, p.68), 중앙지들은 “통신기사를 전채해 놓고는 무슨 혜택을 준 것처럼 생각”하거나(고명식 외, 1965, p.58), 통신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오히려 “통신사와의 불필요한 경쟁”까지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한국신문협회, 1968, p.149) 이것은 결국 재벌 소유 통신사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통신사들의 역할이 존중받지 못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렇듯 통신사들이 과당경쟁을 일삼으며 저자세를 보이던 가운데 신문사들이 통신기사의 크레디트를 달지 않고 보도하고도 “시치미를 뻔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명식, 1969, p.67) 이런 통신기사의 ‘도용’ 또는 ‘표절’은 특히 지방지나 방송사들보다 ‘중앙 일류지’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홍일해, 1965, p.45) 즉 중앙지들은 자체 취재역량이 크게 부족했던 외신의 경우에도 흔히 통신기사의 크레디트를 달지 않고 마치 자신들이 취재한 것처럼 보도했다.(합동통신사, 1975, p.130-131) 다만 신문사들은 “말썹이 날 것 같으면서도” 실어야 할 기사에 대해서만 통신사의 크레디트를 달았다.(고명식 외, 1965, p.59; 장세원, 1971, p.47) 1960년대 이후 빈번해진 통신기사 도용에 대해 통신사들은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했고(김광섭, 1988, p.246), 신문윤리위원회도 이를 규제하는 데 별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한국신문윤리위원회, 1994, pp.532-533)

이렇듯 중앙지들의 통신기사 도용이 빈번해지자, 통신사들은 전채율을 높이기 위해 통신기사 의존도가 높은 지방지를 상대로 하는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지방지들은 중앙 뉴스에 대한 취재역량이 크게 부족했기 때문에(박철, 1965, p.20) 중앙지들과는 달리 외신은 물론 내신까지도 통신기사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³⁵⁾ “명목에 가까운 통신료”만 내던(김동주, 1967, p.3) 지방

35) 1967년도 강원일보의 경우 1면의 50%, 전체 지면의 25%를 통신기사로 채웠다고 한다. (김동주, 1967, p.2) 또한 전국적으로 지방지들은 외신의 100%, 내신의 40%를 통신기사에 의존했다고 한다.(한국신문협회, 1968, p.151)

지를 상대로 한 통신사들의 경쟁은 통신사 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잘 드러내 주는 것이었다. 즉 지방지를 상대로 오로지 전재율만을 높이기 위해 하는 경쟁이야말로 수익성이 없는 불필요한 '출혈경쟁'이었던 것이다.

5. 유신 정권하의 통신사

1) 유신정권의 통신사 정책

유신정권이 등장한 이후에는 언론에 대한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인지 무리를 해가면서 다시 통신사 통폐합이 시도되지는 않았다. 즉 1973년 4월에는 동화통신이 '정부의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로 폐간되어 "통신사 통합은 반만큼 실현"되었고(팽원순, 1982, pp.214-216), 또한 유신체제의 등장 이후 언론의 비판적 활동의 가능성이 거의 봉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신사 통합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 나아가 재벌인 통신사 사주들이 유신정권에 적극적인 협조 자세를 보임으로써 통폐합의 필요성이 별로 없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1974년 1월에는 합동통신의 유홍구 기자가 병무 관련 보도로 인해 군사기밀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있었다. (합동통신사, 1985, pp.294-295) 한편 유신정권은 '김대중 사건'이나 '박동선 사건'같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건에 관한 외신보도를 철저히 통제하여 국내에서는 몇 달 동안이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게 만들었다.(팽원순, 1988, p.86) 비록 통신사가 비판적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유신체제 말기의 정치상황 때문에 유신정권은 통신사에 대해 더 강력하게 통제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다만 유신정권 하에서 문공부 장관을 지낸 이원경(74.9~75.12)과 김성진(75.12~79.12)이 모두 통신사 출신이었기 때문에³⁶⁾ 통신사에 대한 통제가 비

교적 효과적으로 이루질 수 있었기 때문인지 한동안 통신사통폐합이 다시 논의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유신정권 말기인 1979년 초에 문공부 장관 김성진에 의해 다시 통신사 통폐합 방안이 구상되었는데(선경식, 1988, pp.155-156), 이것은 유신정권이 여전히 통신사를 통폐합하여 국가가 더욱 철저히 통신사를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2) 통신사의 소유구조와 경영상태

모기업이 급격히 쇠락해³⁷⁾ 어려움을 겪던 동화통신은 1971년 12월에 44명을 집단해고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다가 결국 1973년 4월에 폐간되었다.(한국기자협회, 1996, pp.59-362) 이에 따라 종합통신으로는 합동통신과 동양통신만 남게 되었지만, 이후에도 경영난은 전혀 해소되지 못했다. 동양통신은 1973년 이후에 지원금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시기와는 달리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연평균 136만원의 적자를 내고 말았다. 마찬가지로 합동통신도

<표 3> 동양통신 지원금 상황

단위 : 천원

연도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액수	120,448	186,000	289,428	366,867	465,572	625,634	811,316	795,992

자료 : 동양통신사(1982, p.239)

36) 이원경은 합동통신 사장으로 재직하다. 1974년 9월에 문공부 장관이 되었다. 김성진은 1970년 12월까지 동양통신 편집부국장으로 근무했고, 청와대 공보비서관을 거쳐 1975년 12월에는 이원경의 뒤를 이어 문공부 장관이 되었다. 김성진은 문공부 장관을 그만둔 뒤 1980년 9월 3일에는 다시 동양통신의 사장이 되었고, 통신사통폐합 후에는 연합통신 초대 사장이 되었다.

37) 50년대까지 이승만 정권과 밀착하여 재계 2위의 위치까지 차지했던 삼호그룹은 1960년대 이후 정권과의 관계 변화, 면방직업의 불황, 부정축재 환수, 환율 개정 직전의 단기 시설제 도입 등의 요인이 겹쳐 급격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공제욱, 1993, pp.251-253)

광고대행실적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한국신문연구소, 1979, p.341) 1973년 7월부터는 운송사업, 사료알선사업 등을 새로 시작하여 통신사업의 결손을 보전해야만 했을 정도였다.(합동통신사, 1975, pp.271-273)

이렇듯 동화통신 폐간 이후에도 두 통신사가 부대사업을 하면서도 계속 적자를 냈던 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과당경쟁의 결과로 전채료가 계속 저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합동통신과 동양통신은 1970년대 중반에 신문·방송사의 전채료를 대폭 인상하고, 신문전채계약을 3년으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원래 전채료가 저율로 책정되어 있었고 인플레이션도 심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한국신문연구소, 1978, p.82; 홍일해, 1982, p.59) 1975년의 경우 중앙지들은 200~300만 원 정도, 방송사들은 100~200만 원 정도,³⁸⁾ 대부분의 지방지들은 10만 원 전후의 전채료를 지불했는데(이환의, 1975, p.110), 이것은 통신원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액수였다.³⁹⁾ 한편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해외경제정보 서비스도 수익성 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⁴⁰⁾

결국 과거와는 달리 종합통신은 두 개만 남고, 신문사나 방송사의 대부분은 흑자를 내던(김해식, 1993, pp.255-256) 1970년대까지도 전채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은,⁴¹⁾ 통신사와 신문·방송사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가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잘 드러내주는 것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그 동안의 과당경쟁으로

38) KBS는 AP와는 직접 계약을 맺고 외신을 수신했다고 한다.(한국방송공사, 1977, p.398) 이 때문인지 또는 전체적으로 통신기사 의존도가 낮았기 때문인지 신문보다 전채료가 낮았다.

39) 1980년의 통신 수입은 13억 3,770만 원이고, 매출원가가 22억 8,844만 원이었다고 한다.(동양통신사, 1982, pp.488-489) 특히 1970년대 말에도 지방지가 지불하는 전채료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10% 미만에 불과한 수준이었다.(한국신문연구소, 1980, p.150)

40) 동양통신의 경우 1980년에 종합통신 판매수입은 11억 3,487만 원이었는데, 국제경제정보 판매수입은 1억 5,285만 원에 머물렀다.(동양통신사, 1982, p.489)

41) 전채료 산출의 가장 중요한 근거인 발행부수가 제대로 파악될 수 없던 현실에서, 신문사들은 광고주에게는 발행부수를 부풀리고 통신사에는 발행부수를 줄이기도 했다.(한국신문연구소, 1978, p.82) 이에 따라 실제로 신문들은 발행부수가 비슷한 일본신문의 10%에도 못 미치는 전채료를 낼 뿐이었다고 한다.(한국신문연구소, 1980, p.150)

인해 통신사 시장은 1970년대까지도 여전히 구매자 시장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두 통신사들은 여전히 과당경쟁을 했고, 이에 따라 통신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인원 확충과 시설 개선에 드는 비용이 갈수록 크게 늘어나면서 이제는 적자 폭을 줄이기조차 어려워지고 말았다. (한국신문연구소, 1978, p.83)

3) 통신사의 역할과 활동

1970년대 이후 통신사들은 출혈을 무릅쓰며 서비스도 더욱 다양화하고 송수신 수단도 크게 개선했다. 합동통신이 1972년에 RES(Reuters Economic Service)와 1973년에 AP-다우존스를, 동양통신이 1976년에 UNICOM뉴스를 계약하여 해외경제정보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합동통신사, 1975, pp.268-269; 동양통신사, 1982, p.342) 이에 따라 1979년 현재 통신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영문외신, 국문내신, 프린트서비스, 시사판(일 4판), 특문판(피쳐물), 사진서비스, 해외경제뉴스서비스 등이 되었다.(한국신문연구소, 1980, p.148) 또한 70년대 이후에는 송수신체제를 우선화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사를 제공하게 되었고 점차로 위성을 이용해 외신을 수신하는 체제도 갖추어 나갔다.(합동통신사, 1975, pp.230-232; 동양통신사, 1982, pp.349-355)

그러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를 ‘외신번역의 대행사’나(팽원순, 1988, p.89), 외국통신의 ‘중계·제공자’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김광섭, 1988, p.247) 실제로 1970년대에는 통신사의 기사 수가 중앙지보다 적었기 때문에(최재욱, 1976, p.164), 내신을 제대로 공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제경, 1975b, pp.51- 52) 또한 중앙지들이 통신사를 경쟁상대로 인식하는 비효율적인 취재관행을 보여주어 어려움이 더 가중되었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1960년대와 마찬가지로 주로 지방지를 대상으로 전재율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1970년대에도 지방지들은 “공개하기조차 민망할 정도”의 전재료

만 내고(김광섭, 1988, p.245) 통신사가 제공한 외신과 내신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중앙지들은 외신을 빈번하게 도용하거나 일부만 크레디트를 달고 전재하는 경향을 보였다.⁴²⁾ 중앙지들의 이런 행태는 통신기사의 크레디트를 다는 것을 마치 신문의 체면이나 권위가 떨어지는 것같이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김광섭, 1975, p.90; 김원호, 1976)

그러나 이런 현상의 궁극적 책임은 통신사에게 있었다. 즉 오랫동안 지속해 온 ‘출혈 경쟁’이 뉴스의 “과잉공급 체제에 대한 수용자의 흐려진 인식”을 낳았기 때문이다.(한국신문연구소, 1978, p.83) 결국 재벌 소유 통신사들이 과열 경쟁 속에서 통신사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고, 또한 신문·방송사들도 통신사를 무시하거나 그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통신사가 “대등한 언론기관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팽원순, 1988, p.89) 결국 재벌 소유였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 비판적 활동을 제대로 못 했을 뿐만 아니라, 과당경쟁까지 일삼음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5. 요약 및 결론

미군정은 대기업인 여러 개의 통신사를 허용하고 어느 정도의 자유를 부여했다. 또한 이승만 정권도 여당통신을 창간해 야당통신의 활동에 대응했을 뿐 적극적인 통제를 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국가의 통신사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져 통폐합이 시도되거나, 취재보도활동에 대한 규제

42) 1976년의 경우 중앙지들은 동양통신이 제공한 외신 중에서 49,715단을 전재했던 반면에 지방지들은 외신 중에서 78,607단, 내신 중에서 147,318단을 전재했다. 중앙지의 내신 전재율은 아예 집계조차 되지 않았다.(동양통신사, 1972, p.296) 1976년 현재 지방 주요 신문의 1면, 2면, 사회면에서 내외신을 막론하고 통신기사가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충남일보》 55%, 《매일신문》 55%, 《전북신문》 54%, 《전남매일》 61%로 나타나기도 했다.(김동주, 1976, pp.181-182)

가 나타나게 되었다. 통폐합 시도는 국가의 관리하에 통신사를 두고 뉴스유통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자 했던 것이었지만 외신사와의 관계 등이 작용해 모두 실패했다. 1960년대 이후 모두 재벌 소유였던 통신사의 활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통제가 필요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통폐합 시도가 국가의 요구와 자본의 논리가 상충됨으로써 나타난 결과였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다만 통신사들이 이미 언론통제에 순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통폐합에 집착했던 것은 더욱 효과적으로 뉴스유통을 통제해야 할 정치적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미군정기부터 이미 통신사들은 시장 규모나 조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가 등장하여 활동했다. 특히 50년대에 정치적 필요 때문에 생긴 통신사들은 과당 경쟁을 하며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어려운 결과를 자초했다. 60년대 이후에 모두 재벌 소유가 되었던 통신사들도 이윤추구가 불가능하다시피 한 제한된 시장 속에서 과당경쟁을 계속했기 때문에 경영상태는 매우 좋지 못했다. 즉 과당경쟁 과정에서 비용 부담은 계속 늘어났던 반면에 신문·방송사들로부터는 전재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대사업에 의존해야만 겨우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비정상적인 경영체제가 지속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종합통신사가 두 개만 남았던 반면에 신문과 방송사의 경영은 안정되었던 70년대까지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은 재벌소유 통신사들의 장기간에 걸친 과당경쟁으로 인해 통신사 시장구조 자체가 크게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통신사는 스스로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과잉서비스만을 일삼았으며, 신문사들은 통신사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전재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기사를 도용하며 통신사와 비효율적 경쟁을 하기도 했다. 즉 통신사가 신문·방송사와 불평등하고 왜곡된 관계를 자초한 가운데 신문·방송사는 통신사의 역할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특히 이런 관행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이었지만, 특히 국가의 통제가 강화되고 통신사들 사이의 경쟁은 격화된 1960

년대 이후 더 강화되었다. 결국 1980년까지 통신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가 계속 유지되었던 것은 통신사 자체는 물론 언론계 전체의 발전까지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1980년까지 재벌 소유였던 통신사들은 국가의 통제하에 언론 본연의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경영을 통한 이윤추구를 할 수도 없었다. 이 점은 1960년대 이후 국가가 신문이나 방송에 대해 통제를 가하는 한편 특혜를 제공하거나 지원을 하기도 했고, 신문과 방송은 이런 특혜와 지원을 받은 것은 물론 시장까지 크게 확대되면서 안정적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즉 국가가 통신사에 대해서는 통제 위주의 정책만을 실시했고, 통신사의 시장구조도 크게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론 본연의 역할을 못하는 것은 물론 제대로 이윤추구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신군부가 1980년에 통신사를 통폐합함으로써 통신사의 이런 구조는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신군부의 통폐합정책에 따라 합동통신과 동양통신이 통합되고, 군소 통신들이 흡수되어 연합통신이 발족되고 여기에 신문·방송사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통신사 통폐합은 국내외의 뉴스 유통을 더욱 효율적으로 통제하려고 했던 것으로서, 언론자본의 이윤추구논리를 제약하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작용했던(김해식, 1993, pp.310-313; 조항제, 1994, pp.246-248) 신문이나 방송의 통폐합과는 성격이 다소 다른 것이었다.

하지만 1980년의 통신사통폐합은 국가의 통신사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뉴스유통을 더욱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 뿐 기존에 통신사들이 안고 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제대로 기여하지는 못했다. 단지 과당경쟁의 요인을 없앴다는 점만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조차도 국가권력의 강력한 통제를 받는 독점체제가 오히려 폐단을 낳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⁴³⁾ 또한 재벌 소유 대신 신문·방송사가 회원사로 참여하는 통신사를 만

43) 통신기사의 공정성을 문제삼는 비판들은 그 원인으로 독점체제 자체보다는 국가권력의 통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의 부재로 인한 안이한 자세를

들었다는 것도 명목에만 그치고 말았고, 재정구조도 단일통신사에 걸맞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신문·방송사의 통신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 즉 통신사와 신문·방송사와의 불평등하고 왜곡된 관계가 거의 변화되지 않았고 전재료와 기사 도용을 둘러싼 문제점들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최병국, 1998, pp.28-33)

따라서 이제는 통신사가 국가로부터 부당한 개입을 받지 않고, 또한 합리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또한 통신사와 신문·방송사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위한 시도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 스스로의 노력은 물론 국가나 신문·방송사들의 인식의 전환이 절대로 요구된다. 정보화·세계화로 요약되는 시대 변화 속에서 통신사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져야만 한다는 필요성은 이제 더욱 절실흌졌다. 또한 그만큼 국가의 통신사 정책이나 통신사 시장구조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통신사의 바람직한 변화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도 더욱 필요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1. 사사, 연감, 연표

계훈모 편(1987), 『언론연표』Ⅱ,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계훈모 편(1993), 『언론연표』Ⅲ,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대한신문연감편찬위원회(1956), 『대한신문연감』.

동양통신사사 편찬위원회(1982), 『동양통신사사』, 성곡언론문화재단.

비판하는 것은 주로 독점체제 그 자체를 그 원인으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9년에 일간지 기자들이 “통신사 독점체제 철폐”를 주장하는 데 연대서명했던 것은 후자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경쟁의 도입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에만 주목했을 뿐 부정적일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고, 또한 신문사 내부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 조선통신사(1947), 『조선연감』 1947년판.
 한국신문연구소(1975), 『한국신문백년』(사료집)
 한국신문연구소, 『한국신문연감』 1977년판, 1978년판, 1979년판, 1980년판.
 한국방송공사(1977), 『한국방송사』.
 한국신문협회(1968), 『한국신문연감』.
 합동통신사(1975), 『합동통신 30년사』.

2. 저서 및 논문

- 고명식 외(1966), 「통신과 신문」, 《신문평론》 1966년 봄호.
 고명식(1969), 「출혈경쟁·과당경쟁의 기현상」, 《저널리즘》 창간호.
 고제경(1975a), 「통신 30년: 새 전기를 위한 변혁기」, 《신문평론》 1975년 5월호.
 고제경(1975b), 「통신 30년」, 《신문연구》 16권 2호.
 고흥상(1959), 「신문과 통신사」, 『현대신문전서』, 학원사.
 공제욱(1993), 『1950년대 한국의 자본가 연구』, 백산서당.
 김광섭(1975), 「나의 언론계 생활」, 《신문연구》 16권 2호.
 김광섭(1988), 『고백과 증언』, 정우사.
 김동주(1967), 「통신과 지방신문」, 《신문평론》 1967년 6월호.
 김동주(1976), 「심층보도의 이론과 실제」, 《저널리즘》 1976년 봄호.
 김민환(1996), 『한국언론사』, 나남.
 김민환·심재철(1995), 「국내의 신문의 국제뉴스 내용분석」, 『국제보도』, 한국언론연구원.
 김원호(1976), 「통신사 경쟁의 문제점」, 《기자협회보》 364호, 1976. 12. 1.
 김형균(1978), 「민족반역자, 돈과 바꾸려던 모 재벌」, 『언론비화 50편』, 한국신문연구소.
 동계 원경수선생 추모문집간행위원회(1991), 『언론인동계원경수』.
 박철(1965), 「통신과 신문」, 《신문평론》 1965년 3월호.
 신인섭(1986), 『한국광고사』, 나남.
 선경식(1988), 「언론통폐합의 결과 속」, 《월간중앙》 1988년 12월호.
 성곡언론문화재단(1995), 『성곡 김성곤전』.
 오소백(1959), 『신문기자가 되려면』 3판, 세문사.
 이영희(1988), 『역정』, 창작과비평사.
 이종모(1978), 「남북협상 단독취재작전과 그 감회」, 『언론비화 50편』, 한국

신문연구소.

- 이환의(1975), 『매스컴 경영론』, 열화당.
- 은종일(1988),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의 통신사 위상」,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동욱(1998), 「세계화 시대에서 통신사의 역할과 정보주권」, 《한국언론정보학보》 11호.
- 장세원(1971), 「신문과 통신」, 《신문평론》 1971년 가을호.
- 정수경(1968), 「한국 mass media 기업의 경영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신문연구소학보》,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 정용현(1970), 「70년도 한국언론의 평점-통신」, 《신문평론》 1970년 겨울호.
- 주동환(1992), 「한국정부의 언론정책이 신문산업의 변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일 고찰」,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진기풍(1965), 「지방신문과 통신사」, 《신문평론》 1965년 3월호.
- 최병국(1998), 「연합통신 위상 재정립의 당위성과 그 방안」, 『정보화·세계화 시대의 정보주권』, 언론노련·기자협회·PD협회·한국언론정보학회.
- 최준(1955), 「통신사의 재건·강화」 상·하, 《조선일보》 1955년 8월 5일·6일.
- 팽원순(1982), 「한국통신사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 팽원순(1983), 「한국정부와 통신사 통합 정책」, 《신문학보》 16호.
- 팽원순(1988), 「연합통신의 문제와 개선방향」, 《저널리즘》 1988년 겨울호.
- 팽원순(1989), 『현대신문방송보도론』, 범우사.
- 팽원순(1990), 「90년대 한국통신사의 과제와 개선방향」, 『90년대 한국언론의 흐름과 전망』, 성곡언론문화재단.
- 현소환(1988), 「국제화시대의 통신서비스」, 『자유경쟁시대의 언론』, 한국언론연구원.
- 홍일해(1965), 「빈번한 통신사 제공기사의 표절」, 《신문평론》 1965년 11·12월호.
- 홍일해(1982), 『한국통신사사』, 일지사.
- 한국기자협회(1996), 『기자협회30년사』 3판.
- 한국신문윤리위원회(1994), 『한국신문윤리30년』.

Books.

- Hachten, W.A.(1996), *The World News Prism, Fourth Edition*, Ames: Iowa State University Press.
- King, J.(1981), "Visnews and UPITN: News Film Supermarkets in the Sky," in J. Richstad and M. H. Anderson(eds.), *Crisis in International News: Politics and Prospects*,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Kingsley, N.(1992), "The Supplemental News Services," in Cook. P. S., D. Gomery, & L. W. Lichty(eds.), *The Future of News*, Washington, D.C.: The Woodrow Wilson Center Press.
- McNair, M.(1994), *News and Journalism in the UK*, London: Routledge.
- Mowlana, H.(1986), *Global Information and World Communication: New Frontiers in International Relations*, 김지운 역(1987), 『국제문화커뮤니케이션론』, 나남.
- Rantanen, T. & E. Vartanova(1997), "The Globalization of Electronic News in the 19th Century," *Media, Culture & Society*, Vol. 19.
- Schwarzlose, R. A.(1992), "The Associated Press and United Press International," in Cook. P. S., D. Gomery, and L. W. Lichty.(eds.), *The Future of News*, Washington, D.C.: The Woodrow Wilson Center Press.